

연구논문

## 두 전쟁박물관과 젠더 인지적 공공역사의 가능성: 이행기 정의의 커뮤니티스\*

김명희\*\*

〈국문초록〉

이 연구는 두 개의 전쟁박물관이 전쟁을 재현하고 기억하는 방식을 이행기 정의의 맥락과 공공역사(public history)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용산 전쟁기념관〉과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전쟁에 대한 대립적 의미와 감정기억을 드러내고 있다. 〈용산 전쟁기념관〉이 남성·군인·전투 중심의 전쟁서사와 감정기억을 재현한다면,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여성·피해자·인권 중심의 전쟁서사와 감정기억을 생성한다. 두 전쟁 박물관에서 나타난 대립적인 젠더 표상체계는 한국 이행기 정의의 담보 지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전쟁에 대한 젠더 인지적 교육이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글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의 사례가 내보인 비판적 잠재력을 ‘이행기 정의의 커뮤니티스’라는 개념으로 가공하여 젠더 인지적 공공역사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남은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공공역사, 〈용산 전쟁기념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전쟁에 대한 젠더 인지적 교육, 이행기 정의의 커뮤니티스

\* 이 글의 초기 아이디어는 2018년 1월 26일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국내심포지엄과 2018년 4월 28일 지역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공유되었으며, 현재 골격을 갖춘 초고는 2018년 10월 12일 경상대 여성연구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각 자리에서 생산적인 토론을 해주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김수진 선생님, 경상대 정진상 선생님, 계명대 안숙영 선생님과 세 분의 심사자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kcckmh@gnu.ac.kr)

© 2018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1. 들어가며

이 글은 생활 속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역사(public history)<sup>1)</sup>의 한 유형인 박물관이 전쟁을 재현하는 방식을 고찰한다. 공공역사는 역사서술과 재현이 이루어지는 사회 영역을 근거로 생겨난 개념이다. 공공역사는 대학과 학계의 전문적 학술 연구와 서술(academic history)에 대비되는 상대 개념으로서 대학과 학계 밖의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역사서술과 재현의 실천양식을 폭넓게 지칭한다. 예컨대 역사박물관과 역사전시, 역사재단과 역사기념, 역사서술서와 매체, 전통과 역사유적지 조성, 역사정책과 과거사 정리, 역사 인물 기념과 추모 논쟁, 지역별 다양한 문화축제, 시민 역사교육과 정치교육, 아카이브와 공동체 역사 프로젝트 등이 공공역사의 유형들로 고려될 수 있다(이동기, 2016: 130-140).

공공역사는 역사가들의 인식 지평과 무관하게 이미 존재했고, 지금 이 순간도 다채로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널리스트와 작가와 증인, TV나 라디오 및 영화를 넘어 기념물과 박물관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역사의 재현이나 평가에 참여해왔고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으로 공공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공공역사는 역사책 밖에서 대중을 상대로 강력한 역사적 흡입력을 자랑한다. ‘공공역사의 지도’가 사람들의 삶이나 문화생활과 밀접한 공간이나 형태와 결부되어 재현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탓이다(정대성, 2016: 206-207).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공공영역에서 많은 역사재현과 서술이 등장했

---

1) 공공역사는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여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에서 역사학의 한 분과로 발전되었고 독일에서도 일종의 융합학문 분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에서 공공역사가 등장하고 발전한 과정에 대해서는 Sayer(2015: 9-12), 독일에서 공공역사 개념과 관점이 수용된 과정에 대해서는 이동기(2016: 130-134)를 참고하라.

고, 그것을 둘러싼 토론이 적지 않았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 시작된 과거사 정리의 흐름 속에서 여러 역사박물관과 역사전시관이 개관했으며, 과거사와 관련된 역사서술과 재현의 방식이 크나큰 학문적 쟁점이자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 중에서도 박물관과 공공역사 사이의 복합적 관계는 이행기 정의의 문화적 국면을 맞이한 오늘날의 적합한 화두다. 전쟁과 광범위한 국가폭력이 일어난 사회가 과거와 다른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은 단번에 완료되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뒷걸음질할 수도 있음을 역사 속 경험들은 말해준다. 특히 내전을 겪으며 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유린과 잔혹행위를 막아내지 못했던 사회의 이행 국면에서 참혹한 과거와의 대면은 필연이며, 그 대면의 문화적 양식 자체가 이행기 정의의 향방과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지구적인 과거사 청산의 실천적 성과와 전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박물관은 점차 하향식 추모의 절차에 중점을 둔 정부 주도의 관행에서 벗어나 자기 성찰의 모습으로 과거를 직면하는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sup>2)</sup>

대표적으로 남미에서 독재의 종식은 역사박물관이 아닌 ‘기억’ 박물관의 건립과 계획으로 이어졌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독재 종식 후 구치소를 트라우마 재현의 현장으로 바꿨는데, 이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시민사회, 생존자 협회, 시민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NGO) 등이 깊게 참여하여 조직된 것이다. 이를테면 일본군에 의한 ‘난징 대학살과 강간(Nanjing Memorial of the Massacre and the Rape)’은 ‘관람객의 화법’에서 ‘희생자의 화법’으로 전환된 민족적 기억을 위한 새로운 전략 중 하나다. 일제 731부대의 범죄 전시관(Crime Evidence Exhibition Hall of Japanese Imperial Army

2) 전쟁기념(박물관)은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냉전시대 전후로 박물관은 승전국으로서 승리를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공간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일깨우고 세계 평화에 응하는 상호인정을 존중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박물관의 활동 패러다임도 점차 중앙에서 지역으로, 컬렉션 중심에서 활용으로, 관료적 운영에서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박신의, 2010: 67).

Unit 731), 대일 저항 기념관(Memorial of the People's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 등은 이러한 범죄피해를 서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인종 학살 박물관이나 추모관의 장소들은 목격자들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고, 장소들 자체가 중요한 증인이 되며 관람객들을 목격자로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박물관은 일종의 접촉 지대(contact zone)다. 특정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과거 또는 다른 문화의 삶과 조우하게 하는 박물관은 역사와 접촉하는 최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개인의 이야기들이 박물관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어느 매체보다 기억 정치에 유효한 박물관의 성격 때문이다(포르치아니, 2017: 124-137).

공공역사로서 박물관의 가능성에 주목할 때 중요한 난점 중 하나는 학문적 연구의 엄밀성을 공공역사의 재현 작업에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이를테면 역사박물관의 역사전시에서 흔히 발생하는 과도한 단순화와 맥락 이탈을 어떻게 극복할지, 또는 전문적 연구와 학문적 성과가 공공역사에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수용될 수 있을지, 또는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는지, 공공역사의 역사재현은 역으로 학문적 역사연구에 어떤 자극과 영향을 주는지, 공공역사에서 권력자 같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개입과 주관적 전횡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역사재현과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서로 다른 기억의 경합을 어떻게 조정하고 소통하게 할 수 있을지 등의 문제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다. 공공역사에서 교육적 차원과 오락적 요소의 긴장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중요한 쟁점이다(이동기, 2017). 이에 대한 공공 역사가들의 잠정적인 대답은 “이질적이고 경합하는 역사 해석과 가치들의 중재자가 되고”(Sayer, 2015: 19), “실제 공공역사의 실천 또는 양상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비판적 조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동기, 2016: 137).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전쟁을 재현하는 두 개의

전쟁박물관에 주목했다. 〈용산 전쟁기념관〉과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 그것이다. 두 박물관은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다룬 박물관은 아니지만, ‘전쟁’을 주요 소재와 정체성의 요체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이 글은 특히 두 박물관의 재현 양식이 촉발한 감정기억의 효과에 주목했는데, 여기서 감정기억이란 특정한 형태의 정치감정을 산출하는 기억작용의 메커니즘을 지시하는 이 글의 조어다.<sup>3)</sup> 이제 살펴보겠지만, 두 박물관은 남성·군인·전투 중심의 국가주의적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 및 적대 감정을 재생산하는 낡은 전시 패러다임과 여성·피해자 인권 중심의 탈국가/탈식민주의적 공공기억(public memory) 및 성찰적 공감을 유도하는 새로운 전시 패러다임이 경합하고 있는 국면을 돌아볼 성찰적 계기를 제공한다.<sup>4)</sup> 이 글은 두 박물관이 전쟁을 재현하는 방식과 그것이 구성하는 감정기억을 교직해 봄으로써, 공공역사 기반 생활 속 인권 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이 글의 집필은 일차적으로 2017년 12월 ~ 2018년 1월 사이 두 전쟁 박물관의 참여관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쟁박물관을 다룬 기존 연구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참조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를 위해 수행된 기본적인

3) 인지와 감정이 서로 융합되어 있듯, 기억과 감정 또한 융합되어 있다. 모든 감정은 미래에 대한 예상과 함께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되살리기를 포함하기에(버킷, 2017: 211-216), 고도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4) 최근 사회적 기억 연구는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과 공공기억(public memory)의 용법을 구분한다. 집합기억은 동일한 사건을 각자 기억할 때 발생한다. 케이스에 따르면, 집합기억은 “서로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의 거대한 수렴”에 가깝다. 이와 달리 공공기억은 대중들이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기억할 때 형성된다(Casey, 2004: 23-24). 다시 말해 사회구성원들이 일정한 시공간을 통해 형성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역사적 사건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통 관점을 합의할 때, 공공기억이 나온다(김명희, 2016: 386-389; Goodall and Lee, 2014: 4-6). 집합기억과 공공기억은 개인들만이 아니라 국가 간 수준에도 자리할 수 있다. 예컨대 일본 정부에 의해 위로부터 만들어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획일적인 공식기억은 집합기억의 형태라 볼 수 있다. 반대로 공론장을 매개로 아래로부터 형성된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기억은 공공기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활용한 사례 연구는 김명희(2018) 참조.

인 연구방법은 참여관찰과 문헌조사다. 전쟁기념관을 다룬 기존 연구(김형곤, 2017; 안경화, 2010; 전희진·박광형, 2016; 정호기, 2014; Jager, 2006)가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기억의 정치와 이를 통해 재생산되는 반공·군사주의의 문제를 의제화한다면,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운동을 재현한 기념관 및 박물관을 다룬 선행 연구(김은경, 2010; 문소정, 2017; 박정애, 2014; 안숙영, 2014; 천경효, 2018)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가 제기하는 이론적·실천적 함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자의 관심사를 연결하여 함께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는 이 지점의 학문적 공백을 메우려는 하나의 시도이며, 이 같은 비교를 요청한 이론적 관계항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다음의 순서로 전개된다. 우선 2장에서는 전쟁과 젠더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통해 이 글의 연구대상이 도출된 문제의식과 주요 개념을 소개한다. 2장의 논의에 기초해 3장에서는 두 개의 박물관이 전쟁을 재현하고 특정한 형태의 감정기억을 산출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재현하는가이다. 이어지는 4장과 5장에서는 두 박물관의 전시 패러다임이 경합하는 국면에서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세대 간의 소통 공간을 '이행기 정의의 커뮤니티스'라는 개념으로 가공하여 공공역사의 방법론적 과제와 가능성을 토론한다.

## 2. 전쟁과 젠더: 이행기 정의의 비판적 쟁점

전쟁박물관은 기억의 생산 뿐 아니라 전쟁으로 희생당한 전사자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후세들에게 전달하는 사회적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기념관 또는 박물관들과 구별된다. 기념관과 박물관들은 생산자의 여러 기획 또는 의도에 따라 전시물의 선택, 분류, 배치, 설명 등 다양한 전시 방법으로 하나의 이야기(narrative)를 구성하는 장소다. 또한 기념관과 박물관은 문화적 재현 행위(representation)를 통해 국가정체성을 일상적으로 생산하며 공유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쟁기념관의 건설은 근대 국민국가를 완성해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여문환, 2009: 27). 이 점에서 전쟁박물관은 그 자체로 국민형성의 정치적 장소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전쟁박물관은 젠더를 체험하고 내면화하는 정치적 장소다. 헤아려보면 전쟁은 결코 젠더중립적이지 않으며 젠더에 깊이 침윤되어 있다. 잘 알려져 있듯, 20세기 후반부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르완다, 코소보, 보스니아, 소말리아, 수단 등지에서 발생한 전쟁과 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이며,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다. 1차 세계대전 사상자 중 15%만이 민간인이었다면 2차 세계대전의 민간인 사망자는 65%로 증가했고 이른바 저강도(low intensity) 전쟁에서 민간인은 전쟁 사망자의 90%를 차지했다. 여성과 아동은 전쟁 난민의 4/5를 구성하며 이들은 빈번하게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처럼 여성의 전쟁경험은 남성과 다르며 정신적·육체적 고통 역시 참전 남성들 못지않게 심각함에도 국제관계학과 역사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쟁 담론에서 젠더를 고려한 관점은 오랫동안 배제되었다. 하지만 폭력과 전쟁은 성차별을 기반으로 한 사회구조와 분리되어 설명할 수 없다는 사회학적·여성학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젠더가 전쟁 연구에 중요한 개념으로 도입되었다(구은숙, 2009: 8).

대표적으로 페미니스트 사회학자 신시아 코번(Cynthia Cockburn)은 페미니스트 입장론<sup>5)</sup>의 관점에서 전쟁에 대한 젠더사회학(또는 젠더 관점을

5) 페미니스트 입장론(feminist stand point theory)의 핵심테제를 요약하면 중립적 연구자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현실은 연구자와 무관하게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

가진 전쟁사회학)을 발전시켰다. 그녀의 저서 제목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서』(*From Where We Stand*, 2007)는 이러한 관점을 잘 표현한다. 젠더 관계는 계급과 민족 관계들과 교차하고 복잡하게 얽히며, 때로는 그러한 관계들을 압도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고, 발전하고, 지속하는 데 현존한다. 그녀의 관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젠더 관계야말로 실제로 군사주의와 전쟁이라는 큰 그림의 주요한 한 부분”이며, “젠더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코번, 2009: 51). 실제 페미니스트 사회과학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20년 넘게 전쟁 연구와 젠더 연구는 서서히 서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sup>6)</sup>

나아가 오늘날 동아시아 과거청산을 둘러싼 역사전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잘 보여주듯, 젠더 이슈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sup>7)</sup>의 비판적 쟁점으로 부상했다(김명희, 2017b; 2018). 한국에서 ‘이

---

하는 것이다(이나영, 2017; 조주현, 2018; 하딩, 2009).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미를 만들기 때문에, 지식은 보편화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전쟁을 바라본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해 코번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 운동이 산출하는 입장론, ‘위치성(positionality)’과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사고하는 반군사주의 페미니즘을 발전시켰다(코번, 2009: 49-50).

6) 1980년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페미니즘 이론과 연구는 전쟁 연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81년 “전쟁, 국가, 사회”라는 주제로 열린 영국의 사회학 토론회에서 1950년대와 70년대 지식인들이 급진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생산해 내는 과정에서 기본적 문제인 전쟁을 간과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1985년 〈전쟁과 평화의 사회학〉(*The Sociology of War and Peace*)이라는 논집을 출판한 영국사회학회는 전쟁양식을 재생산하는 근원적 요인은 문화, 이데올로기, 정치적 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페미니스트 잘나 한머(Jalna Hanmer)와 메리 메이너드(Mary Maynard)의 저술은 젠더 관점을 가진 전쟁 사회학이 출현할 수 있는 교두보를 제공했다(코번, 2009: 440).

7) 국제적으로 볼 때 이행기 정의 연구는 1995년에야 첫 연구서가 나올 만큼 신생 분야라고 할 수 있다(Kritz, 1995). 이행기 정의 이론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전후 처리,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군사재판과 극동 군사재판을 통해 본격화되었고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의 발전은 이행기 정의 연구가 발전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이행기 정의는 여전히 확장 중인 개념이다. 초기에는 “정치 변동의 시기 지난 정권들에서 저질러진 부정직한 행위들을 다루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정치 변동 과정의 일부로서 과거의 정치적 폭력을 다루기 위한 노력들”로 보다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Leebaw, 2011: 120; Teitel, 1999: 94).



행기 정의'라는 개념이 '과거청산'을 대신한 학술 용어로 부상한 맥락에는 과거청산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일상의 부정의(injustice)와 직결되어 있으며, 그 해법 또한 일회적인 방식이 아니라 종결되지 않는 과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비근한 예로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되었던 조직적인 성폭력에 대한 증언과 폭로는 전쟁과 국가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이행기 정의와 젠더 정의가 각각 별개로 고찰되어야 할 독립적 쟁점이 아니라 상호 내재적 관계를 맺고 있는 내포적 쟁점임을 깨닫게 한다. 말하자면 역사적으로나 동시대적으로나 전장의 폭력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폭력)과 젠더(폭력)가 맺고 있는 내밀한 관계가 성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전쟁범죄를 묵인하고 유지시키는 사회구조와 일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용산 전쟁기념관>과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서로 연루된 고찰의 대상으로 상정한 이유다.

시기적으로 보면 1964년 국방부에 의해 제기되어 1988년 대통령의 건립지시가 있는 후 1994년 완성된 <용산 전쟁기념관> 설립프로젝트는 독립기념관의 설립에 뒤이은 것으로, 안보국가라는 맥락에 자리한 국민형성 프로젝트의 하나였다. 1990년대 성장한 평화운동 단체들이나 학계에서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전쟁기념관이 아니라 평화기념관이라는 비판이 제출되었지만, 전쟁을 기억하는 국가주의적 시각은 매우 강고했다(정근식, 2006: 292-293). 이에 비해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제출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대한 고찰은 대안적인 전시서사와 탈국가주의적 공공기억의 가능성을 모색할 전향적 교두보를 제공한다.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전쟁과 젠더를 재현하는 두 박물관의 유형적 특징을 건립주체와 장소, 전시공간과 서사, 활용방식 및 교육효과의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두 개의 접촉지대:

#### 두 박물관이 전쟁을 재현하고 기억하는 방식

##### 1) 〈용산 전쟁기념관〉: 분단 국가주의의 집합기억

###### (1) 건립주체와 장소

전쟁을 다룬 박물관은 공공역사의 핵심 장이자 역사문화의 매개다. 그렇기에 건립 전에 공공영역에서의 토론과 검토는 필수적이다. 건립 목적과 의도가 여러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장소와 주체 및 운영 과정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소통적 절차가 중요하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비판적이고 개방적인 토론을 전개하면서 역사박물관 구상과 계획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때 단순히 국민 또는 시민들의 집단 감정에만 의거해서도 안 되고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집단 정체성의 활용의 도구로 박물관이 구상되어서도 안 된다. 공공영역에서 심사숙고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만 중구난방의 비전문적이거나 상업적인,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박물관 난립을 막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박물관 건립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한 대중들의 사회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이동기, 2017).

이 같은 준거에 비추어 볼 때 용산기념관의 건립주체와 과정이 보여준 근원적 문제는 민간 시민단체나 학술 전문가의 참여가 처음부터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애초 용산기념관의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쟁기념사업위원회’는 7명의 장군과 39명의 장교로 구성되었다. 기념관의 건립은 20여억 원의 국민모금과 130여억 원의 국방부 예산으로 집행되었는데 모금 참여자의 대다수가 군장병, 저명인사, 기업인이라는 점은 기념관의 건립이 사회 구성원의 폭넓은 지지 위에서 진행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한편 전쟁기념사업위원회와 외부 자문단이 제안한 기념관의 명칭은 ‘호국기념관’과

‘군사박물관’이었다. 결과적으로 전쟁기념관이라는 명칭이 채택되었지만 전쟁을 기념한다는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사업 초기부터 제기되었다. 당시 위원회는 논란의 해소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때도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현역 장성이었다. 이런 연유로 〈용산 전쟁기념관〉은 군대의 역사와 역할에 대해 홍보하고 자국이 행한 전쟁의 역사를 계승하는 군사박물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전쟁에서 순국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기념묘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안경화, 2010: 173-174).

건립 장소 또한 주체 및 주체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 전쟁기념관이 자리한 장소는 1988년 대전으로 이전하기까지 육군본부로 사용되었던 서울의 용산동 1가다. 알다시피 용산은 제국주의 군대의 점령지였던 것을 대한민국 군대가 계승하고 있다가 서울의 외연적 확장과 함께 육군본부가 이전하면서 비게 된 자리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순사에서 국방부가 ‘전쟁기념관 건립계획’을 보고한 것이 1994년 건립된 전쟁기념관의 시발점이었다(전희진 · 박광형, 2016: 18).

결국 ‘대한민국 유일의 전쟁사 종합박물관’을 표방하는 전쟁기념관의 건립목적은 살펴보면, 1) 호국자료의 수입, 보존 및 전시 2) 전쟁의 교훈과 호국정신(‘호국안보’)을 배우는 산 교육장 3) 선열들의 호국위훈 추모다. 전쟁기념관은 옥내전시와 옥외전시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시자료는 총 5,700여점에 이른다. 14,000여m<sup>2</sup>의 옥내전시실은 ‘호국추모실’, ‘전쟁역사실’, ‘6·25전쟁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기증실’, ‘대형장비실’ 등 7개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각종 호국전쟁 자료와 공훈 등이 실물·디오라마·복제품·기록화·영상 등으로 전시되어 있다. 옥외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장비를 비롯, 세계 각국의 대형무기와 ‘6·25전쟁’ 상징 조형물, 광개토태왕릉비, 형제의 상, 평화의 시계탑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기념관 전시실 입구 양측 회랑에는 창군 이래 국군 전사자와 유엔군 전사자명비가 있다(용산 전쟁기념관, 2018). 요컨대 〈용산 전

쟁기념관)은 설립세력부터 과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일명 ‘6·25전쟁’)에 중점을 둔 전시방법에 근거하여 반공안보의 가치관에 입각해 만들어졌다.

## (2) 전시공간과 서사

### ① 남성·군인·전투 중심 기념관: 전쟁발발을 기념하는 국가

이에 따라 전쟁기념관의 전시공간은 주로 군사적 재현과 담론으로 구성되고, 전투 중심의 전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7개의 전시실로 구성된 전시공간 중 ‘6·25 전쟁실’은 전체 2, 3층 전시면적 3,064평의 1,404평을 차지하여 가장 크다.

전시실의 디스플레이는 무기, 군복, 준장비, 표식, 유품들을 분류하는 한편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전투현상을 일화 형식으로 종합하는 이분법적 방식이 특징이다. 객관적 정보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전쟁의 공포, 승리의 감격과 같은 격한 감정들이 디오라마(diorama)로 재현된 환영을 통하여 보충되고 과장된다. 예컨대 군대의 발전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무기를 나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내외의 장비실에는 탱크, 비행기, 헬리콥터, 미사일과 같은 대형장비들로 이루어진 스펙터클이 연출된다. 인명을 살상하는 병기와 무기를 무비판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 전쟁을 적극 선동하는 행위는 아닐지라도 - 암묵적으로 전쟁이나 침략에 대한 긍정이 될 수 있음에도 ‘평화’가 아닌 ‘전쟁’ 발발을 기념하는 국가의 왜곡된 전시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안경화, 2010: 172-173).

또한 <용산 전쟁기념관>의 전시공간에서 두드러지는 현격한 특징은 ‘여성의 부재’다.<sup>8)</sup> 피난지에서의 생활상과 학도병으로 참전한 학생들에게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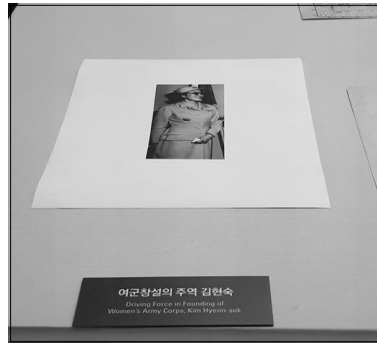
8) 근대국가의 박물관에서 ‘2등 국민’인 여성의 경험과 기억은 쉽게 망각되어 왔으며, 특히

애된 공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시 공간은 전투복을 입은 근육질의 남성 군인들이 점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4D로 체험하는 영화관의 전쟁서사는 낙동강 전투에 참여했던 80세 할아버지의 시선과 전시(戰時) 회고담 - 주로 전투와 기아의 체험으로 짜여진 - 으로 관객과 조우한다(〈사진 1〉 참조). 극히 드문 일이지만, 여성이 등장할 때조차 전쟁에 나서는 군인/병사의 어머니로 모성화된 여성이거나, 군인으로서의 여성일 뿐이다(〈사진 2〉 참조). 이렇듯 ‘군인들만의 전쟁’을 일면적으로 재현하는 〈용산 전쟁기념관〉은 “군인의, 군인에 의한, 군인을 위한 기념관”(안경화, 2010: 173)으로 전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사진 1〉

자료: 용산 전쟁기념관(2018)



〈사진 2〉

자료: 용산 전쟁기념관(2018)

전시물과 조형물에 있어서도 전쟁기념관의 전시구조는 국난 극복의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를테면 국난사적 역사기술을 통해 한국전쟁을 ‘경험의 공통성’으로 처리하고, 태평양전쟁의 경험은 ‘식민지배의 암흑기’로 일축하는 반면,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전쟁의 역사를 외세에 의해 수난당한

---

전쟁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 그들은 주변화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김은경, 2010: 182; Levin, 2010: 111).

민족사로 재현한다. 한국 민족이 어려운 역사적 역경을 극복했다는 국난 극복의 서사 속에서 일제 강점기 동안의 희생은 되레 한국을 강하게 발전 시킨 것으로 조명된다. 한국전쟁과 관련해선 스스로를 열강들 사이 각축전의 피해자, 이데올로기 투쟁의 희생양, 북한의 남침야욕의 희생자로 구성하면서 자기 방어적 정당방위의 서사가 두드러진다. 이 연장선상에서 군인의 용맹성과 영웅담이 강조되는 남성 중심의 애국주의가 전시서사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여문환, 2009: 76-77).

이 속에서 한국전쟁을 둘러싼 국제관계 또한 불균등한 선별 기준에 의해 재현된다. 국외의 경우 미국과 유엔군에 대한 조명과 평가가 긍정적인(동맹·우방·아군) 관점에서 접근되었다면, 북한군과 빨치산 그리고 중국과 소련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조명된다. 이러한 적대의 서사 속에서 유엔군이라는 ‘정의’의 상징과 중공군, 소련, 북한이라는 ‘불의’의 상징이 이분법적으로 배열되는 플롯을 반복한다(김형근, 2017: 218; 여문환, 2009: 76; 정호기, 2014: 68). 너무나도 익숙한, 한국전쟁을 둘러싼 이 같은 공식기억은 반공안보의 가치관에 선별된 집합기억의 전형을 보여준다.

② ‘피난민 서사’ 속에 가려진 민간인/여성 인권과 분단국가/군사주의의 재생산

이 같은 전시서사와 재현체계에 내재한 가장 큰 맹점은 전쟁에 의해 희생당한 많은 민간인이나 여성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통과 경험이 가려지고 ‘은폐’된다는 점이다.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민간인의 재현은 주로 ‘피난민’의 모습과 삶으로 나타난다. ‘피난민’은 전쟁으로 생활 터전을 떠나야 했던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생활용품과 갖고 가족과 함께 또는 홀로 이동하는 모습, 궁핍하게 생활하는 모습, 미군의 보호를 받거나 구호물자를 지급받는 모습, 구직 모습 등으로 재현되었다. 재현 방법은 주로 문자와 사진이 이용되지만, 〈용산 전쟁기념관〉에서는 인형과 소품을 활용해 피난지에서 생활하는

피난민의 삶을 재현하고 있다. 하지만 ‘피난민’으로 표상된 ‘일반적’ 서사에서 ‘구체적인’ 사람들의 보다 ‘구체적인’ 고통, 예컨대 전쟁이 동반한 참혹한 여성인권의 실태나 한국전쟁 시기 행해진 남한 군인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사례는 은폐된다. 민간인의 죽음은 과거사 청산운동과 법률의 제정 및 실행으로 그나마 정치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기존 전쟁 박물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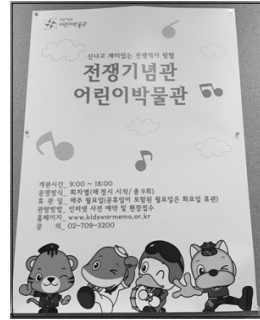
결국 ‘전쟁기념관’은 그 이름 그대로 ‘전쟁 발발’을 기념하는 장소이자, 남성중심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적대적 감정기억을 무반성적으로 재생산하는 현장이 되고 있다. 이는 전쟁기념관을 매개로 분단체제하 침체한 기억의 정치가 젠더 정치와 상호 얽혀 들어가는 단면을 보여준다.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가해자로서의 자기역사에 대한 역사적 성찰의 결여와 무반성성은, 베트남전쟁을 재현하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의 방식과 뚜렷한 차이와 대비점을 드러낸다.

### (3) 활용방식 및 교육효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작동하는 기억의 정치와 젠더 정치가 산출한 교육적 효과는 박물관을 관람한 학생들이 자신의 소감들을 적은 수기 또는 메모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용산 전쟁기념관〉은 서울 시내에 위치하여 시민들이 관람하기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규모나 체계에서도 교육 공간으로 쓰임이 크다. 특히 매년 6월이 되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어린 유치원생을 비롯해 많은 학생들이 관람한다.

9) 예컨대 학계에서 통상 100만으로 추정되는 민간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아예 발견할 수 없다. 이는 민간인에 대한 제반 통계가 미흡하고 조사와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일 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재현 대상으로 선호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 간혹 민간인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경우에도, 주로 북한군이나 북한 측을 지지했던 세력이 가해자다(정호기, 2014: 6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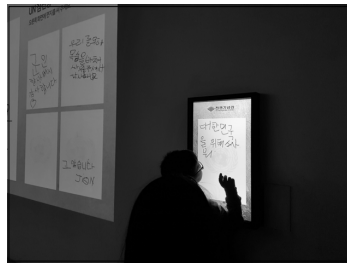
이를 겨냥해 〈용산 전쟁기념관〉 부설기관으로 2014년 개관한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쉬운 언어로 전쟁기념관의 전쟁서사를 반복하며 ‘체험’과 ‘놀이’, ‘유희’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사진 3〉 참조).<sup>10)</sup> 그런데 이렇게 유희 중심으로 구축된 전시 공간은 오히려 방문객 스스로 느끼고 자극받고 성찰하는 것을 방해한다. 예컨대 아이들이 기념관을 나오며 적어내는 소감 메모는 - 대부분 기념관 측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 관람을 한 아이들이 박물관에서 느낀 세세한 감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사진 3〉

자료: 용산 전쟁기념관(2018)

〈사진 4〉에서 보듯 “대한민국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의 천편일률적 서사는 전쟁기념관을 관람한 어린이들이 반공/분단 국가주의의 논리구조와 감정을 대부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음을 일러준다. 무엇보다 전투를 체험한다는 구상 자체가 인권감수성의 결여를 드러내는 치명적 문제임에도, 유감스럽게도 어린이박물관은 인권에 대한 어떠한 성찰도 없이 아이들의 전쟁 체험 놀이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획일적인 전쟁 서사의 주입, 군사적 경험의 회고와 무기 체험, 놀이 등을 통해 어린이 박물관은 분단/안보 국가주의와 남성 중심의 군사주의를 무/의식적으로 사회화하는 기능



〈사진 4〉

자료: 용산 전쟁기념관(2018)

10)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역사를 콘텐츠로 하는 어린이 박물관으로” “우리의 전쟁역사를 학습하는 교육적 공간이자, 만지고 조작하며 즐기는 체험적 공간으로, 고대부터 6·25전쟁까지의 전쟁역사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 되었다(용산 전쟁기념관, 2018).



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실상 성인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를 바 없는 바, 기념관에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젊은 나이에 죽은 군인들의 모습이 찍힌 흑백의 사진들로 빼곡한 전시실(‘호국추모실’)은 슬픔의 감정을 극대화하면서 - 전쟁의 성격 여하를 불문하고 - 죽음 앞에 선 인간으로서의 숙연함을 자아낸다. 하지만 그 죽음과 마주하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쉽게 추상적인 ‘국가’에 대한 추모 감정으로 회수되어 버린다(이영진, 2015). 결국 전쟁기념관은 전사를 둘러싼 감정공동체가 끊임없이 형성되는 루트(route)이자 분단 국가주의의 적대/추모 감정과 젠더화된 군사주의를 내면화하며 ‘또 하나의 전쟁’을 수행하는 감정기관(emotive institution)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전쟁 피해자인 여성의 목소리와 인권의 관점에서 설계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의 표상체계는 전쟁을 수행하는 남성의 이야기와 국가를 중심으로 짜여진 <용산 전쟁기념관>의 표상체계와 명확한 비판적 관계를 드러낸다.

## 2)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탈국가/탈식민주의의 공공기억

### (1) 건립주체와 장소

<용산 전쟁기념관>의 사례와 여러 측면에서 대조적인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의 건립과정은 국가, 특히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가 결코 젠더중립적인 운명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일러준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간”으로 문을 열었다. 아울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며 전쟁과 여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행동하는 박물관”을 표

방하고 있다(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2018).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2003년 12월 18일 박물관 건립을 결의했고, 이를 위한 점화식을 당시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진행했다. 이후 1년에 걸쳐 박물관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해 21개 정대협 회원단체의 논의를 거쳐 2004년 12월 16일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위원회’가 발족식을 가진데 이어 모금 활동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용산 전쟁기념관〉과 비교한다면,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그 건립 과정에서부터 민간에 의해 주도된 -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결합된 학술적 성과를 반영하는 - ‘아래로부터의 박물관’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sup>11)</sup>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의 건립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건립 장소를 둘러싸고 전개된 젠더 정치다. 2012년 5월 5일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의 성미산 자락에 자리 잡은 박물관은 원래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공원〉 안에 건립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2007년에서 2008년에 걸쳐 광복회를 비롯한 32개 독립유공자 단체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독립공원 내에 위안부 박물관 계획을 승인한 것은 몰역사적 행위로서 독립운동을 폄하시키고 순국선열에 대한 존경심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박물관 건립을 인가했던 서울시도 이에 굴복했고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던 정대협은 성미산 자락으로 부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모은 20억 원의 성금으로 뒤늦게 공사를 시작하여 박물관은 애초의 예정보다 2년여 늦게 문을 열게 되었다.

---

11) 일본군 ‘위안부’를 단일 주제로 전시하는 전시관은 한국과 일본, 중국에 네 곳이 있다. 한국의 경우 광주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1998.8.14 개관), 마포구에 소재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2012.5.5 개관), 일본 도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상하이 사범대학에 소재한 〈중국 ‘위안부’ 자료관〉(2007.7.5 개관)이 그것이다. 이들 모두 민간의 기금과 모금을 중심으로 설립하였으며, 정부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박정애, 2014: 234).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의 건립과정은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경험이 있는 포스트식민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남성’ 국민이 어떻게 ‘여성’ 국민을 배제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안숙영, 2014: 41-49).

## (2) 전시공간과 서사

### ① 참여하는 박물관: 피해자와 청중, 과거와 현재의 만남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민간 주택을 활용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의 전시 공간은 마을 주민들의 접근성과 친화성을 높이는 조건이 된다(〈사진 5〉 참조). 또한 지하 1층 → 2층 → 1층의 순으로 이어지는 전시 공간은 협소한 공간이 지닌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동선의 용이성을 최대화하고 있다. 이 같은 관람 동선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구성하는 중층적인 테마와 전시서사가 잘 압축되어 있다.<sup>12)</sup>



〈사진 5〉

자료: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2018)

12) 전시 공간은 맞이방(여정의 시작) → 쇠석길(역사 속으로) → 지하전시관(그녀의 일생) → 계단전시(호소의 벽) → 역사관(전쟁이 낳고 키운 기형적 제도 - 일본군 '위안부') → 운동사관(History를 Herstory로 바꾼 그녀들의 목소리) → 생애관1 → 기부자의 벽 → 생애관2 → 추모관 → 1층 상설관(세계분쟁과 여성폭력) → 기획전시관1 → 기획전시관 2 → 참여+약속의 공간 → 뮤지엄숍&인포 센터 → 자료실 → 박물관 뜰(휴식과 담소)의 순차적 서사로 연결되어 있다.

박물관은 크게 3층의 전시공간과 17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속에서 ‘위안부’ 피해의 역사와 운동사가 교차하며 피해 생존자와 관람객의 만남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먼저 지하 1층의 전시공간은 크게 ‘쇄석길’과 생존자들의 일생을 소품으로 형상화한 ‘지하전시관’(‘그녀의 일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공간은 크게 두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시실 입구의 검은 철문을 열면(〈사진 6〉 참조) 시작되는 포화 소리와 함께 관람객은 순간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을 느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의 역사로 들어서게 된다. 쇄석길 문이 열리자마자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처럼 포성이 들려오고, 군화발 소리가 들린다. 당시의 여성들이 어디로 가는지 영문도 모르는 채 전쟁 속으로 갔듯 관람객들도 그 길을 따라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윤미향, 2012: 206).



〈사진 6〉

자료: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2018)

이 같은 전시 방식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폭력성을 유물이나 재현물을 통해 사실적으로 증명하고 전달하려는 기왕의 방식과 달리, 당혹스러운 공간에서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이 느꼈을 고통에 동참하도록 한다. 이는 -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과 마찬가지로 - ‘위안부’ 여성의 피해를 대상화하지 않고, 피해자와 관람자의 거리를 좁히는 기능을 담당한다(김은경, 2010: 191-192).

쇄석길의 벽면에는 피해자들의 실제 얼굴과 손을 석고로 본을 떠 만든 부조가 설치되어있고, 지하 1층 전시공간으로 내려가는 계단 벽면에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기반해 직접 그린 미술 작품들이 부착되어 있다. 이 부분은 과거에 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주관적 기억과 피해

자의 객관적 모습이 동시에 드러나면서 과거와 현재, 주관과 객관, 경험과 현실을 연계하는 기능을 한다(천경효, 2018: 711). 보일러실을 개조해 만든 지하전시실 또한 전쟁터와 위안소를 체험하는 공간이다. 광주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위안소 재현 공간이 실제 위안소 사진을 복원해서 직접적으로 '위안부'의 공포를 '체험'하도록 했다면, 박물관의 위안소 재현은 환유에 기대 감성적 공감을 유도한다(박정애, 2014: 246, <사진 7>



<사진 7>

자료: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2018)

참조). 이러한 전시방식은 전시 성폭력의 재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위안부' 재현을 상세히 고찰한 김은경이 적절히 지적한 바 있듯, 성폭력 체험을 '생생하게' 전달하려 할 때 성적 인 피해의 이미지는 늘 선정성과 긴장관계에 있는 까닭에 예기치 않은 미끄러짐(불온하고 음험한 상상력)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위안부'는 그를 보는 시선에 의해 타자로 고정되거나 대상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재현 방식을 넘어서기 위해선 연민이 아니라 공감, 나의 문제로 이 문제를 고민하는 성찰적인 자세와 전시 방식이 고안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김은경, 2010: 193-198).

## ② 서사적 박물관(narrative museum):

사건사와 운동사, 증언과 전시, 설명과 서사의 만남

지하 1층과 2층을 연결하고 있는 '호소의 벽'이라는 계단 벽면엔 피해자들의 고백이나 증언이 다양한 손 글씨로 새겨져 있다. 이를 따라 읽으며 들어선 2층의 전시 공간은 크게 '위안부' 제도의 진상을 보여주는 '역사관'과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과정을 담은 '운동사관', 할머니들의 기록을 담은

‘생애관’, 그리고 ‘기부자의 벽’과 ‘추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전시 공간에는 사건사와 운동사, 생애사와 사회사, 증언과 전시, 설명과 서사가 서로 교차한다.



〈사진 8〉

자료: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2018)

이들테면 〈사진 8〉의 ‘역사관’은 ‘위안부’라는 용어에서부터 위안소가 생겨난 배경,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보여주는 군 문서, 위안소 구조와 규율, 종전 후 피해자들의 상황, 일본 군인들이 기증한 위안소 출입증과 일기장, 군 문서, 유품 등의 여러 사료를 통해

‘위안부’의 발생 배경과 피해 상황을 사건사적으로 설명한다. 예컨대 위안소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 직접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 축소해가며 확인할 수 있는 위안소 맵은 일본군 ‘위안부’ 정책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윤미향, 2012: 209).

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담고 있는 ‘생애관’은 한국 현대사의 사건사적 연대기 속에 피해 생존자들의 분열적이고 다층적이며, 복합적인 생애사를 교차시켜 ‘위안부’의 삶과 고통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전시방식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채록한 구술사의 학문적 성과와 새로운 전시 패러다임이 결합되면서, 사실을 실증하거나 계몽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관객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서사적 박물관(narrative museum)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다.

역사관 코너를 돌아 나오면 펼쳐지는 ‘운동사관’은 피해자의 역사로 환원되지 않는, 문제 해결의 일주체로서 일본군 ‘위안부’의 운동사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의 ‘커밍아웃’을 이끌어낸 신고 전화기, 수요 시위를 처음 열었을 당시 입었던 집회복, 긴박했던 순간의 각종 문건 등이

그것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동사관은 2000년 법정, 입법·소송운동, 국제연대 등 다양한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다. 운동사관은 ‘바위처럼’이라는 노래와 어우러진 수요시위 영상으로 마무리된다. 영상 화면의 정면엔 수요시위 현장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압축적으로 담아낸 이 공간에서 ‘위안부’는 피해자인 동시에 증언자, 운동가로 재현된다.

또한 ‘기부자의 벽’과 ‘추모관’은 이 공간에 들어선 관람객 또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구성하는 일부이자 중요한 주체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위안부’를 과거의 피해자만이 아니라 오늘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견인하는 정치적 행위자로 재현하며,<sup>13)</sup> 박물관의 관람객 또한 이 운동의 참여자로 적극 끌어들이는다.

③ 반성으로 기억하는 가해의 역사: 탈식민 대항적 공공기억의 가능성  
 지하 2층의 전시공간을 관람한 후 1층으로 내려오면 세계분쟁과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을 다룬 상설관과 베트남전을 다룬 기획전시관이 기다린다. 상설전시관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었던 제국주의 전쟁의 폭력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 간 전쟁, 종족 간 분쟁, 집단 간 내전 등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이 겪는 폭력과 공유될 수 있는 경험임을 웅변한다(〈사진 9〉 참조). 이는 <용산 전쟁기념관>이 전쟁의 역사와 그 피



〈사진 9〉

자료: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2018)

13) 팡주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 대한 김은경(2009: 177-178)의 분석을 참고할 때, 이 점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서 훨씬 더 두드러진다.

해를 민족의 시련과 국난 극복의 서사로 재현함으로써 남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 담론구조에 갇혀버린 것과 대립적 의미를 부각시킨다. 이를 통해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일국적인 이해 방식을 넘어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걸어온 탈식민의 역사가 전시 성폭력에 반대하고 보편적 여성 인권과 평화를 옹호하는 초국적 시민운동과 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맥락화하는데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4)</sup>

특히 정부수립 70년 특별전으로 설치된 기획전시실은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베트남 여성들의 아픔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노예제의 가해자인 일본 정부(군대)의 책임만이 아니라 전시 성폭력에 대한 한국군의 가해 책임을 함께 의제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일본의 ‘WAM(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의 전시 방침과도 공명하는 지점으로<sup>15)</sup>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가 가해자로서의 자기 역사를 반성하고 책임을 마주하는 성찰적 연대를 통해 공통의 대항 기억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내보이는 지점이다(〈사진 10〉 참조).



〈사진 10〉

자료: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2018)

### (3) 활용방식 및 교육효과

결국 〈용산 전쟁기념관〉과 비교할 때,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의 전시구조는 기존 이분법적인 가해-피해 관계의 전형성을 넘어서려는 노력을

14) 물론 1층 상설전시관 전시서사의 투박함과 미비점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자세한 논의는 박정애(2014)와 천경효(2018)를 참고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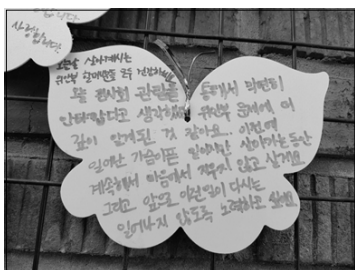
15) 이와 함께 문소정은 글로벌 페미니즘이 주도하는 WAM의 기억정치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식민주의적 민족차별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정대협외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소정(2017: 396-397)을 참고하라.



보인다. 전시 성폭력의 피해자인 동시에 운동의 주체이자 자기 삶의 행위자로서 ‘위안부’를 재현하면서 관람객(목적자)의 성찰과 참여의 공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노력도 그러하거나, 베트남전쟁의 가해자였던 한국군의 위치에 대한 자기반성 또한 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충분치 않다고 할지라도 이 같은 시도가 산출한 교육효과와 감정기억을 박물관 관람객들의 소감메모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사진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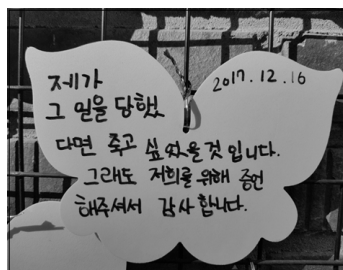
“오늘날 살아계시는 위안부 할머니들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 전시회 관람을 통해서 막연히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전에 일어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마음에 지우지 않고 살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지혜롭게 이 고통의 역사를 바라보겠습니다. 잊지 않겠노라 다짐했지만 당신들의 청춘이 아파 눈물이 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분노하겠습니다.”



〈사진 11〉

자료: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2018)



〈사진 12〉

자료: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2018)

이와 같은 체화된, 그리고 성찰적인 공감의 서사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관람한 관람객들의 서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이다. 동일한 추모 감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용산 전쟁기념관〉의 경로와 의견상

유사하지만, “저희를 위해 증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사진 12>의 소감 메모는 - <용산 전쟁기념관>의 사례와 달리 -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투쟁과 희생이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세대인 ‘나를 위한’ 것으로 달리 해석되는 단면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추모의 궁극적 대상 또한 <용산 전쟁기념관>의 경우처럼 추상적인 국가가 아닌, 구체적인 사람들로 변모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전시 성폭력이 낳은 피해의 실정과 고통에 대한 더 깊은 앎과 설명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감을 소통시키는 ‘행동하는 박물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 4. 이행기 정의의 커뮤니티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죽어 있는 과거의 사실들을 집적한 공간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경험과 기억으로 불러들이고 이를 유통시키며 새로운 대항기억과 담론을 만들어가는 생성적 공간이자 살아있는 인권교육의 현장으로 자리한다. 이를테면 박물관에서 일어나는 ‘목격’이라는 인지적·정서적 체험은 목격자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건(및 사람)과 맺고 있는 나의 위치(place)를 재/발견함으로써 피해자와 관람객/청중의 경계를 좁혀가는 성찰적 계기로 작동한다.

한편 전쟁 범죄와 폭력이 남긴 외상 경험이 공적 기억에 얼마나 수용되고 수용되지 않았는가의 문제는 전시 인권 침해가 남긴 역사적 트라우마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방법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재현된 공공기억은 “트라우마적 기억과 역사 사이에 매개적인 관계”를 열어준다(김수진, 2013: 64). 증언연구를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트라우마 재현과 구술사의 인식론·방법론적 난점을

섬세하게 돌아본 김수진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성찰적 극복이 “공감적 듣기”와 “공감적 청중의 사회적 확장 과정”에서 비로소 모색될 수 있다는 점을 일찍이 발견한 바 있다. 자신의 상처에서 타자의 울부짓음을 듣는 일은 공감적 청중과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며, 공감적 청중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은 고통한 트라우마의 반복을 그칠 수 있는 말하기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점을 이행기 정의라는 보다 큰 사회변동의 맥락에 접목해 본다면,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의 작동방식은 상징인류학자 빅터 터너(2014)가 사회극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며 사회적 반구조(anti-structure)라 부른 것과 유사하다. 여기서 사회극(social drama)이란 어떤 사회 공동체 내에 중요한 계기를 형성한 극적인 사건을 둘러싸고 ‘구조(structure)’와 ‘반구조(anti-structure)’ 사이에서 펼쳐지는 동적인 사회과정의 단위를 말한다. 구조와의 관계에서 볼 때 반구조(anti-structure)란 여러 가지 대체 모델들의 생성을 지시한다. 이 대체 모델들은 변화의 흐름을 형성하는 사회·정치적 역할 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터너, 2014: 54, 72-81).

이러한 통찰은 사회적 삶을 고정불변의 사회적 사실이 아니라 역동적인 ‘되어감의 과정’으로 보는 사회관에 근거한 것이다. 터너에 따르면 사회관계에는 2가지 양식이 있다. 하나는 정치적·법적·경제적인 지위가 구조화되고 분화된 계급적 체계의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평등한 개인으로 구성된 미조직되고 미분화된 중간집단의 양식이다. 후자를 터너는 코뮤니타스(communitas)라 부른다. 달리 말해 코뮤니타스란 “역사적·특질적·구체적 개인들 사이의 어떤 매개되지 않은 관계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행동하는 그런 본질적인 방법”을 말한다(터너, 2014: 76).

또한 코뮤니타스는 상호작용의 형식에 따라 세 가지 유동적 형태를 지닐 수 있다. ‘자발적 코뮤니타스’, ‘이념적 코뮤니타스’, ‘규범적 코뮤니타스’

가 그것이다. ‘자발적 커뮤니티’는 보다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아이덴티티들의 만남을 지칭한다. 한편 ‘이념적 커뮤니티’는 자발적 커뮤니티의 상호작용들을 기술하기 위해 이론적 개념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면 더듬거리면서도 자발적 커뮤니티에 대한 자기의 구체적인 체험을 ‘말’로 그려내기 위해 물려받은 문화적 과거를 살살이 뒤지기 시작한다. 끝으로 ‘규범적 커뮤니티’란 또 하나의 ‘지속적인 사회체계’로서 자발적 커뮤니티를 다소간 지속적인 토대 위에 증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하위문화 혹은 사회집단을 지칭한다(터너, 2014: 79-82).

이렇게 볼 때 커뮤니티는 구조의 ‘틈새’ 공간 혹은 ‘변형’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정지된 공간에 갇혀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동체(community)와 구분되며, 일시적 행위나 일회적 사건을 넘어 새로운 구조를 지향하는 흐름(flow)을, 즉 ‘이행(transition)중인 과정’ 혹은 ‘과정적 구조’를 포착하기에 유용하다.

이러한 1990년대 초 일본군 ‘위안부’의 구술 증언을 채록하는 과정에서 생존자들의 존재를 찾아 나선 여성 지식인/활동가들과 피해생존자들의 우연하고 자발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촉발된 자발적 커뮤니티가 ‘정대협’이라는 네트워크와 수요시위로 발전하면서 ‘여성인권’과 ‘정의’, ‘반전’과 ‘평화’를 비롯한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부가되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역사기록과 교육적 지향이 박물관으로 구체화되면서 일련의 규범적 커뮤니티가 제도화되었다. 이 속에서 박물관의 참여자들은 목격이라는 인지행위와 정서적 소통을 통해 조직적인 전쟁범죄가 낳은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삶을 현재를 살아가는 내 역사(my history)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관람객/구경꾼의 위치에서 벗어나 역사의 증언자로 행동하는, 나아가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또 그들을 향해 행위하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한다.<sup>16)</sup> 이러한 작동방식은 여성인권운동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열어놓은 대항적 반구

조, 이행기 젠더 정의의 독특한 발현 양식을 드러내 보여준다.

인권교육의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같은 작동방식은 박물관이 세대 간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미래에 대한 책임을 계승하는 이행기 정의의 커뮤니티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박물관이 제공하는 전시공간은 물질문화의 정수로만 기능하던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대중들의 참여를 통해 전시공간과 전시대상이 상호작용하는 장소로 재배치될 수 있으며(김명식·정희원, 2016: 103), 전쟁과 관련된 어떠한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여성인권과 정의, 평화의 감수성을 일깨우는 대항적 공공영역(counter public sphere), 혹은 친밀한 공공권(intimate public sphere)의 ‘매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sup>17)</sup>

## 5. 토론 및 함의

이 연구는 두 개의 전쟁박물관이 전쟁을 재현하고 기억하는 방식을 이행기 정의의 맥락과 공공역사의 관점에서 성찰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 두 전쟁박물관의 표상체계는 건립주체의 차이만큼이나 전쟁과 젠더에 대

16) 이렇게 볼 때 가장 엄격한 사회제도들도 자발적 커뮤니티의 체험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티는 항상 전구조적(pre-structural)이다. 커뮤니티 집단들은 자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외피를 점차 개발해간다(터너, 2014: 82, 96). 터너의 통찰에 착안하여, 국가폭력에 얽힌 생애사적 고통을 뚫고 5·18의 기억과 4·16의 기억이 유족과 유족,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을 넘어 소통하면서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고찰로는 김명희(2017a)를 참고하라.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직후 일종의 ‘자발적 커뮤니티’로 만들어진 5·18 유가족들의 모임이 점차 ‘오월어머니집’으로 발전되어 국제인권교류의 장이자 아시아 인권레짐의 일부로서 ‘규범적 커뮤니티’의 형태로 성장해온 과정에서 ‘이행기 정의의 커뮤니티’ 특유의 동태와 작동방식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7)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열어놓은 탈식민 저항적 공공권/친밀한 공공권의 가능성은 김명희(2016)를 참고하라. 안숙영(2014) 또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의 건립과정에서 ‘하위주체들의 공적 대항 공간’의 시도와 가능성을 읽어내고 있다.

한 대립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용산 전쟁기념관〉과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남성·군인·전투 중심의 전쟁서사와 여성·피해자·인권 중심의 전쟁서사가 경합하는 국면을 선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전쟁과 젠더가 얽여 들어가는 한국적 사회화의 맥락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리고 두 전쟁박물관이 맺고 있는 비판적 관계로부터 인권중심 공공역사의 구축을 향한 방법론적 과제와 함의를 도출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두 박물관의 대립적 의미는 정부수립 70년이 지났음에도 '내부적 탈식민화'의 과제가 여전히 진전되지 못했음을 일러준다. 이를테면 식민지 전쟁에 대한 반성이 주로 '바깥에 있는' 과거 제국주의 국가와 '외부적 탈식민화'에 초점을 맞출 때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재생산되는 남성중심적 민족주의를 성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안숙영, 2014: 62-63). 마찬가지로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이 외부에 있는 가해국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을 군사적으로 착취한 자기 국가들의 가해의 역사와 대면하지 않을 때, '내면화된 군사주의'를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재생산되는 전시 성폭력의 문제를 성찰할 수 없다.<sup>18)</sup> 이 지점에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은 박물관이 성장세대로 하여금 식민지와 전쟁의 역사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고 우리 안의 부정의를 성찰할 반성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글은 전쟁 범죄 및 정치적 폭력의 유산을 다루는 이행기 정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청중, 세대와 세대 간의 만남과 책임의 소통이 일어나는 관계적 공간을 이행기 정의의 커뮤니티스라는 개념으로 가공하여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18) 특정한 형태의 남성성이 만들어지는 문화적 과정이 군사주의와 전쟁이라는 맥락에 자리한다면 "남성성은 전쟁을 형성하고, 전쟁은 남성성을 형성"하며, "가부장제는 군사주의에 의해 강화되고 군사주의는 가부장제를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가부장적 관계를 전복하는 일은 곧 반군사주의 전략이 될 수 있"으며(코번, 2009: 454, 461) 그 역도 가능할 것이다. 이 점에서 젠더 인지적 관점의 구현 정도는 이행기 정의의 실질적 진전 수준을 가늠할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선, 한국 전쟁박물관의 전시 관행 전반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향후 진전될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탈분단 평화의 시대, 여성 인권과 젠더 정의의 관점에서 (재)설계되고 수정된 박물관은 풀뿌리 시민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반인권적이고 구시대적인 전시 관행의 오류를 시정할 반성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공감능력의 재형성을 위한 새로운 인권적 감성의 정치”(정정훈, 2014: 64)의 경로를 제공한다. 이 지점은 젠더 인지적 관점에서 공공역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던 이 글의 문제의식을 요약하는 바, 기본적으로 공공역사는 역사에 대한 공공의식과 접근성(proximity)을 확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두 박물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 공공역사의 장은 치열한 이데올로기가 경합하는 쟁투의 장이기도 하다. 이는 공공역사가에게 더욱 큰 과제와 책임을 부여한다. 역사가들은 자료의 비판적 평가부터, 개념화의 과정까지 모든 틀을 잘 활용하여 대중의 역사와 학계의 역사 사이에 흐르는 험한 강물 위에 다리를 놓고 토론의 사회적 공간을 확장할 의무가 있다(포르치아니, 2017: 140-143).

이에 더하여 분과학문적 사유와 관행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전쟁을 재현하는 관점과 프레임 자체를 여성인권과 정의, 그리고 평화라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가치로 전환해가는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교육학자의 역할 또한 동시에 수행한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와 매개를 통해 그러한 가치가 우리네 일상의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하는 모든 구성적이고 변형적인 협동 작업은 학문과 사회, 대학과 지역의 소통을 촉진할 새로운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구은숙(2009), “전쟁과 여성: 젠더화된 폭력과 군사주의 문화”, 『미국학논집』, 제41권 3호, 5-33쪽.
- 김명식·정희원(2016), “전쟁기념(박물관)의 새로운 전시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4호, 98-104쪽.
- 김명희(2016),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재구성 장치로서 친밀적 공공권(親密的 公共圈)의 가능성: 코리언 디아스포라 생활세계 비교연구를 위한 하나의 시론”, 『민주주의와 인권』, 제16권 2호, 351-398쪽.
- \_\_\_\_\_(2017a), “국가에 대항하는 가족: 세월호 연대의 감정동학과 루트 패러다임”, 『탐라문화』, 제56권, 215-246쪽.
- \_\_\_\_\_(2017b),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부인(denial)의 정치학: ‘제국의 위안부’ 사태 다시 읽기”,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235-278쪽.
- \_\_\_\_\_(2018),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시인(recognition)의 정치: 한국의 사회적 기억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34권 3호, 113-146쪽.
- 김수진(2013),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군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여성학논집』, 제30권 1호, 35-72쪽.
- 김은경(2010),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의 ‘위안부’ 재현과 기억 정치”, 『한국학연구』, 제35집, 177-203쪽.
- 김형곤(2017), “한국전쟁의 공식기억과 전쟁기념관”, 『한국언론정보학보』, 제40권 4호, 129-220쪽.
- 문소정(2017), “행동하는 자료관 「WAM」과 일본군 ‘위안부’의 기억정치학”, 『동북아 문화연구』, 제50권, 385-400쪽.
- 박신의(2010), “노근리평화기념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조직 운영 방안”,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제3권 2호, 40-68쪽.
- 박정애(2014), “정대협 운동사의 현재를 답다: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역



- 사비평』, 제106호, 229-262쪽.
- 버킷, 이안(2017), 『감정과 사회관계』, 박형신 옮김, 파주: 한올아카데미,  
Burkitt, I.(2014), *Emotions and Social Relations*, London: Sage.
- 안경화(2010), “전쟁의 재구성: 기념관 속의 한국 전쟁”, 『한국근대미술사학』,  
제21권 21호, 167-186쪽.
- 안숙영(2014), “젠더와 국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의 건립과정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4권 2호, 41-68쪽.
- 여문환(2009), “동아시아 전쟁기억의 정치와 국가정체성: 한·중·일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외교안보학과 박사학위 논문.
- 윤미향(2012), “나비, 희망으로 날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서 만나는 평화”, 『계간 민주』, 제5권, 202-213쪽.
- 이나영(2017), “페미니스트 질적 연구의 원리: 입장 인식론과 페미니스트 정치학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2권 4호, 71-99쪽.
- 이동기(2016), “공공역사: 개념, 역사, 전망”, 『독일연구: 역사, 사회, 문화』, 제31호, 119-142쪽.
- \_\_\_\_\_ (2017), “현대사박물관을 통한 역사교육의 방향: 학습지와 디즈니랜드 사이에서”,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봄철 학술대회 ‘실천인문학’의 쟁점과 전망 자료집(2017.5.24).
- 이영진(2015), “감정기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야스쿠니 문제 재론”, 『기억과 전망』, 제32호, 12-52쪽.
- 전희진·박광형(2016), “역사적 기억의 덧쓰기(palimpsest)에 대한 국면사적 접근: “용산 전쟁기념관”과 “제주 4·3 평화공원”의 비교”, 『문화와 정치』, 제3권 1호, 1-25쪽.
- 정근식(2006), “기억의 문화, 기념물과 역사교육”, 『역사교육』, 제97호, 277-305쪽.
- 정대성(2016), “독일 68운동의 ‘공공역사’ I: 대학생 베노 오네조르크 추모 조형물”, 『독일연구』, 제32호, 205-232쪽.

- 정정훈(2014), 『인권과 인권들: 정치의 원점과 인권의 영속혁명』, 서울: 그린비.
- 정호기(2014), “전쟁박물관에 재현된 사람들: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102호, 47-73쪽.
- 조주현(2018), 『정체성 정치에서 아고니즘 정치로: 여성학 방법론과 페미니즘 정치의 실천적 전환』,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천경효(2018),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과 공공기억”, 『인문사회 21』, 제9권 1호, 705-716쪽.
- 코번, 신시아(2009), 『여성, 총 앞에 서다』, 김엘리 옮김, 서울: 삼인, Cockburn, C.(2007), *From Where We Stand: War, Women's Activism and Feminist Analysis*, London: Zed Books.
- 터너, 빅터(2014), 『제의에서 연극으로: 놀이의 인간적 진지성』, 김의두·이기우 옮김, 서울: 민속원, Turner, V.(1982), *From Ritual to Theatre: The Human Seriousness of Play*, New York: PAJ Publications.
- 포르치아니, 일라리아(2017), “공공역사와 박물관: 복합적 관계”, 『현대사광장』, 제8권, 김수진 옮김, 124-145쪽.
- 하딩, 샌드라(2009),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여성들의 삶에서 생각하기』, 조주현 옮김, 서울: 나남, Harding, S.(1991), *Whose Science? Whose Knowledge?: Thinking From Women's Live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Casey, E.(2004), “Public Memory in Place and Time”, in *Rhetoric, Culture, and Social Critique: Framing Public Memory*, eds. K. P. Pillps, S. Browe, and B. Biesecker, Alabam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pp. 17-44.
- Goodall, J. and C. Lee(eds.)(2014), *Trauma and Public Memor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Jager, S. M.(2006), “Monumental Histories: Manliness, the Military, and the War Memorial”, in *Transformation of Twentieth Century Korea*,

- eds. S. H. Lee and Y. Chang,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245-265.
- Kritz, N. J.(ed.)(1995), *Transitional Justice: How Emerging Democracies Reckon With Former Regimes, Volume I: General Consideration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Leebaw, B.(2011), *Judging State Sponsored Violence*, Cambridge: Imagining Political Change.
- Levin, A.(ed.)(2010), *Gender, Sexuality, and Museums: A Routledge Reader*, New York: Routledge.
- Sayer, F.(2015), *Public History: A Practical Guide*, London: Bloomsbury Academic.
- Teitel, R. G.(1999), *Transitional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인터넷 자료〉

- 용산 전쟁기념관(2018), <https://www.warmemo.or.kr/newwm/main-new/main.jsp>(검색일: 2018.01.10).
-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2018), <http://www.womenandwarmuseum.net/contents/main/main.asp>(검색일: 2018.01.10).

(논문 투고일: 2018.10.31, 심사 확정일: 2018.11.28, 게재 확정일: 2018.12.19)

〈Abstract〉

## Two War Museums and the Possibility of Gender Perspective Public History: The Communitas of Transitional Justice

**Kim, Myung Hee\***

This paper examine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history and in the context of transitional justice, how two specific war museums represent and commemorate war. The Yongsan War Memorial of Korea and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reveal different and conflicting meanings and emotional memories regarding war. While the narrative and emotional memory of the Yongsan War Memorial of Korea focuses on men, nation-states, and battles,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focuses on women, victims, and human rights. The gendered representation systems implicit in these two museums highlight the need for gender education in respect to war. In this respect, it is proposed that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has potential as a "Communitas of Transitional Justice," demonstrating the methodological possibil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public history.

**Key words:** public history, Yongsan War Memorial of Korea,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gender perspective education about war, communitas of transitional justice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